

해설 내용은 개정된 법령(2023. 10월 기준)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행정학 자료 및 문의사항은 네이버카페 '김재준 행정학'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문 1.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?

- ①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한다.
-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반영한 직무급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.
- ③ 개방형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,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다.
- ④ 조직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, 그 직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대상이 된다.

문 2. 사바스(Savas)의 재화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장재(private goods)는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해 행정의 개입도 가능하다.
- ② 공유재(common pool goods)는 과다 소비와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발생한다.
- ③ 요금재(toll goods)는 X-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.
- ④ 집합재(collective goods)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.

정답 및 해설

- 1. ③  
·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부족하다. 유연함과 신축성은 계급제의 특징이다.
- 2. ③  
· 요금재는 시장에 맡길 경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자연독점(natural monopoly)으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다. X-비효율성은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말한다.
- ※ 사바스의 재화 및 서비스 유형

	경합성	경합	비경합
배제성			
배제		시장재 (private goods)	요금재 (toll goods)
비배제		공유재 (common pool resources)	집합재 (collective goods)

문 3.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가외성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.
- ② 공익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.
- ③ 기계적 효율성은 행정의 사회목적 실현과 다차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.
- ④ 수평적 형평성은 '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'는 원칙으로,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을 용인한다.

문 4. 다음 글의 저자와 그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?

격언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의 하나는, 예를 들어 "뛰기 전에 살펴라"라는 격언과 "지체하는 자는 진다"라는 격언에서 볼 수 있듯이, 상호모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. 이러한 격언과 같이 기존 행정학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리는 상호모순성이 많다.

- ① 윌슨(Wilson)은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립하려고 했다.
- ② 애플비(Appleby)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·순환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.
- ③ 굿노(Goodnow)는 정치를 국가의지의 표명으로, 행정을 국가의지의 집행으로 정의했다.
- ④ 사이먼(Simon)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 사실만을 다루는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을 주장했다.

정답 및 해설

- 3. ①  
② 공익과정설에 대한 설명이다. 공익실체설은 공익을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으로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로 사익을 초월하여 선형적·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다.
- ③ 디목(Dimock)이 제창한 사회적 능률에 대한 설명이다. 사회적 능률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으로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.
- ④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다. 수평적 형평성은 '동등한 것을 동등하게'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4. ④  
· 사이먼(H. A. Simon)은 '행정행태론'에서 행정관리론의 분업의 원리, 명령통일의 원리 등은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아 과학성과 보편성을 지니지 못한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.

문 5. 국가재정법상 (가)에 해당하는 기관만을 모두 고르면?

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(가) 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(가) 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정부가 (가) 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, 감액에 대한 (가) 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ㄱ. 헌법재판소
- ㄴ. 중앙선거관리위원회
- ㄷ. 국민권익위원회
- ㄹ. 국가인권위원회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ㄷ, ㄹ

문 6. 공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이념형적 모델인 주주(shareholder) 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(stakeholder)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보며,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목표이다.
- ② 주주 자본주의 모델의 기업규율방식에는 이사회 의 경영감시, 시장에 의한 규율 등이 있다.
- ③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며, 이해관계자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목표이다.
- ④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종업원 지주제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단기 업적주의를 추구한다.

정답 및 해설

5. ①

· 국가재정법 제40조(독립기관의 예산) 제2항: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(국회·대법원·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)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,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6. ④

· 주주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.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경영 참여는 이사회를 통한 근로자의 경영 참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장기적 성장 촉진을 추구한다.

문 7.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민투표의 대상·발의자·발의요건,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주민투표법으로 정하고 있다.
-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이 가능하며, 이 제도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.
- ④ 주민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.

문 8.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앨더퍼(Alderfer)의 ERG이론은 하위단계에서 상위 단계로의 욕구단계 이동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 시 회귀적이고 하향적인 욕구단계로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본다.
- ② 허츠버그(Herzberg)의 2요인이론은 종업원의 직무환경 개선과 창의적 업무 할당을 통한 직무성취감 증대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본다.
- ③ 아담스(Adams)의 공정성이론은 인식된 불공정성이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본다.
- ④ 브룸(Vroom)의 기대이론은 노력, 성과, 보상, 만족, 환류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-성과 간 관계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자질, 그리고 역할 인지를 강조했다.

정답 및 해설

7. ①

- ②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: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5년 도입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.
- ④ 지방자치법 제25조(주민소환) 제1항: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(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)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.

8. ④

· 브룸(Vroom)의 기대이론은 노력-성과 간 관계에 있어 기대감(Expectancy)을 제시하였는데,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.

문 9.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·도에 설치하며 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며 시·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·의결한다.

문 10. 조직문화 및 변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ㄱ. 퀴(Quinn)은 경쟁가치모형을 활용해 '내부지향-외부지향'과 '유연성-통제(안정성)'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도출하였다.

ㄴ. 홉스테드(Hofstede)는 '권력거리'의 크기가 큰 문화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고 본다.

ㄷ. 레빈(Lewin)은 조직 변화의 과정을 현재 상태에 대한 해빙(unfreezing), 원하는 상태로의 변화(moving), 새로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동결(refreezing)하는 3단계로 제시하였다.

- ① ㄱ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ㄱ, ㄴ, ㄷ

정답 및 해설

9. ③
- 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10. ②
- ㄴ. 홉스테드는 '권력거리'의 크기가 작은 문화에서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고 본다. 권력 거리가 큰 경우 제도나 조직 내에 내재되어 있는 상당한 권력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한다.

문 11.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?

- 다수의 평정요소와 평정요소별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으로 구성
- 평정요소별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대상자 평가
- 평정요소와 평정등급에 대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

-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
- ② 가감점수법
- ③ 서열법
- ④ 체크리스트 평정법

문 12. 현대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환경적 결정에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·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,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.
- ② 조직근생태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보고, 조직의 발전이나 소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서 찾는다.
- ③ 혼돈이론은 조직이라는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, 복잡한 현상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지향 한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.
-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기술, 규모, 환경 등의 다양한 상황요인에 대한 조직적합성을 발견함으로써,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.

정답 및 해설

11. ①
- ② 가감점수법: 피평정자의 우수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, 과오나 실패에 대해서는 감점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.
  - ③ 서열법: 피평정자 간의 근무성적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쌍쌍비교법(paired comparison method), 대인비교법(man to man comparison) 등이 있다.
  - ④ 체크리스트 평정법: 평정자가 평정표(평정서)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 또는 질문을 보고 피평정자에게 해당하는 것을 골라 표시하는 방법이다.
12. ④
-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·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고 본다.

문 13. 공무원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- ② 임용시험 성적과 임용 후 근무성적 간의 연관성이 높다면 임용시험의 기준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.
- ③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- ④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.

문 14. 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, 징역 또는 벌금 등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.
- ② 지방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였다.
- ④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 등록의무자 모두가 등록재산 공개대상은 아니다.

문 15.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비(比)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.
- ②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합계액의 비를 의미하며 보통교부세 교부여부의 적용기준으로 활용된다.
- ③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비를 의미하며 기본적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.
- ④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로 나눈 것으로 세입구조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.

문 16.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·계속비·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.
- ③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,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
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정답 및 해설

13. ④

· 국가공무원법 제29조(시보임용) 제1항: 다만,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14. ②

· 지방공무원법 제54조(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):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 및 해설

15. ②

· 보통교부세 교부여부의 적용기준은 재정력지수이다.

\* 이 문제에서는 용도제한이 없는 의존재원(보통교부세 등)을 자주재원으로,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다. 다만, 기존의 기출문제와 일부 학자들은 자주재원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보고 있다.

16. ③

·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

문 17. 정책대안의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과거 또는 현재의 정책을 참고로 하거나 외국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한 정책들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점증주의적 접근에 해당한다.
- ②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질적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③ 주관적·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가 있으며 이들은 대안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안의 결과예측에서도 활용된다.
- ④ 브레인스토밍은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활동이다.

문 18. 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로위(Lowy)의 분배정책은 돈이나 권력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.
- ② 리플리(Ripley)와 플랭클린(Franklin)의 보호적 규제 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는 정책이다.
- ③ 아몬드(Almond)와 파월(Powell)의 상징정책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에게 인적·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.
- ④ 로위(Lowy)가 제시한 정책유형론은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을 확보하고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7. ②  
·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18. ②  
· ① 로위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. 분배정책은 시민에게 권리나 이익, 또는 재화나 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.  
· ③ 아몬드와 파월의 추출정책에 대한 설명이다. 상징정책은 국민에게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거나 다른 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글의 날 공휴일 지정, 광화문 복원, 월드컵 개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.  
· ④ 로위가 제시한 정책유형은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. 로위의 정책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들도 있고, 로위의 정책유형 중 어느 하나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에 걸쳐서 있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이다.

문 19. 정책평가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후적 비교집단 구성(비동질적집단 사후측정설계)은 선정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.
- ② 진실험은 모방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.
-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진실험과 같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.
- ④ 진실험과 준실험을 비교하면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준실험이,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진실험이 더 우수하다.

문 20.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·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, 주요 현안 시책,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,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9. ③  
·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준실험설계로서 진실험에 비해서 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.
20. ②  
·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7조(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):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·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·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 
·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(특정평가의 절차) 제1조: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, 주요 현안시책,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 
·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(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) 제1항: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,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